



[산업]
UAE·태국서
'국내 화약' 터진다
한화, 수출 개시
05



코스피	2201.48 (+11.01)	코스닥	739.91 (+9.33)
금리	(국고채 3년) 1.80 (+0.01)	환율	(원·달러) 1121.70 (-2.20) (13일)

개성공단 폐쇄 3년… '비운의 기업' 대화연료펌프 결국 부도

"한때 직원 900명… 재가동 기다리며 버티다 탈진"

70여 개국에 오일펌프 수출
계열사 8곳 둔 글로벌 기업
개성서 공장 2곳 설립·가동
폐쇄 후 어음 못막아 부도
회생절차 통해 재기 다져

"1~2년이면 재가동이 될 줄 알고 어떻게든 고객들을 유지하기 위해 밑지면서까지 제품을 팔았는데 사태가 길어지다보니 기력이 탕진됐다. 세상의 뒷전으로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더라."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강제 폐쇄된 후 꼭 3년째가 된 가운데 벼티고 베티던 기업 한 곳이 결국 부도가 났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자동차 및 산업용 오일펌프와 필터 등을 수



인천 송도에 위치한 대화연료펌프 본사 1층에 자체 개발한 전기차가 세워져있다.

/김승호 기자

출하며 한 때 매출이 500억원까지 달했던 강소기업인 대화연료펌프에게 닥친 일이다. 대화연료펌프는 계열사 8곳을 포함해 전체 매출 가운데 약 80%를 해외에서 벌어들인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다.

13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대

화연료펌프는 지난 1일 돌아온 5억원 정도의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가 됐다. 이날은 닷새간의 설 연휴를 코앞에 둔 때였다.

인천 송도에 있는 대화연료펌프 본사에서 지난 12일 만난 창업주 유동옥 회장은 "한반도신경제

지도에서 주역 역할을 해야 할 기업들이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 이 모양이 됐다"면서도 "36년 넘게 유지해 온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내 책임"이라며 자신 탓으로 돌렸다.

불행 중 다행으로 부도 직후 부동산 매각과 기업 회생을 추진하던 대화연료펌프는 기자가 회사에 방문한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신청의 첫 단계인 타당성이 인정돼 회생절차에 들어가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됐다.

39년 생으로 올해 우리나라로 팔순인 유 회장은 현대차에서 자재과장 등을 거쳐 부품담당 이사로 퇴임한 뒤 82년에 대화연료펌프의 전신인 대화정밀을 창업했다. 현대그룹에서 자동차사업을 진두지휘했던 '포니정' 정세영 회

장이 당시 유 회장을 면담해 자동차 부문으로 이끈 인물이기도 하다. 유 회장이 현대차 공채 1기였던 셈이다.

유 회장은 "그 시절 자동차 연료펌프는 국산 제품이 전무했다. 부품의 상당수를 미국 포드사에서 가져와야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면서 "인간의 심장과 같은 연료펌프를 직접 만들어보기 위해 현대를 나와 회사를 차렸고, 노력끝에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97년 IMF를 겪으면서 현대차를 벗어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집중한 유 회장은 머큐리(미국), 보쉬(독일), 델파이(미국), 타타대우(인도), 미쓰비시(일본)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그러다 유 회장이 개성공단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0년 초반 개

성공단이 1단계 건설을 시작하고, 2004년에 시범단지 입주기업 15곳 명단에 포함되면서다.

유 회장은 "정부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처음 선정하는 일이었던 만큼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다. 제일 좋은 재무구조를 가졌던 기업이 이젠 (재무가) 가장 않좋은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회장은 개성공단에 각각 80억원과 100억원을 들여 '개성대화'와 '개성유니'를 잇따라 설립하고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 두 곳에서 채용한 북한 근로자만 900명이 훌쩍 넘었다.

필터의 90% 가량, 기계식 펌프의 90% 정도를 개성에서 만들면서 북한에서의 생산비중도 절대적으로 많았다.

〈3면에 계속〉

/송도(인천)=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실업대란 속 세금풍년… 경제 엇박자

1월 실업자 122만명… 19년 만에 최대

제조, 도·소매업 고용 부진에
취업자 1만9000명 증가 그쳐

정부의 올해 첫 일자리 성적표가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점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실업률은 4.5%로 2018년 1월 대비 0.8%p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고, 정부가 올해 제시한 목표치 15만명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제조업 등에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비교시점인 지난해 1월에 취업자 증가폭이 커던 기저효과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만9000명, 농림어업에서 10만7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에서 17만명, 도매·소매업에서 6만7000명이 감소



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줄고 있는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 폭이 전달인 작년 12월의 12만7000명 보다 확대됐다. 전자장비·전기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는 것 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감소했다. 여기에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4만9000명 줄어들면서 전달 보다 감소 폭을 키웠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59.2%로 1년 전보다 0.3p 하락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4000명 늘어난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 이상에서 실업자 수가 증가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원 징수됐다.

교통세는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3000억원 늘었다. 기타 세수입은 3조2000억원, 특별회계 수입은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국세 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초과 세수는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 때문에 세수 추계 능력 및 재정 운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계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작년 초과세수 25조… 곳간만 풍성

소득·법인세 21조 늘어 '역대 최대'

지난해 정부가 걷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년도인 2017년 보다 21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2018년 소득세는 전년보다 9조4000억원 늘어난 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보다 11조8000억원 늘어난 70조9000억원이 징수됐다.

기재부는 "월평균 임금 상승과 건축물 등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이 소득세 수입 확대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법인세 증가는 기업 실적이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유가증권 시장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2016년 67조6000억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100조6000억원으로 48.9% 늘어남에 따라 법인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징수액은 역대 가장 많았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및 민간소비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70조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대개조'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전국경제투어의 일환으로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혁신전략보고회 및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발로 밟은 운동에너지를 전기로 만드는 '압전에너지' 기기를 개발한 에이치엔제이의 부스를 방문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전국경제투어 여섯번째-부산 부산 스마트시티 '대개조' 로봇·미래 수변도시 육성

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요람"이라며 "부산은 '새로움의 통로'다. 해외 문물이 부산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와 상품이 부산을 통해 세계로 나갔다. 오늘 부산은 스마트시티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했다. 백지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도시를 결합하려는 애심찬 계획"이라며 "특히 부산의 스마트시티는 로봇 등 새로운 산업육성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친환경 미래수변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민간과 함께 3조7000억원을 스마트시티 계획에 투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스마

/우승준 기자 dn1114@